

기후변화와 호주의 사회·정치적 균열* **

Climate change and socio-political cleavages in Australia

박순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자연(과학적) 사실의 복잡성과 더불어 그 원인, 효과, 대응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대립 때문에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곪절된다. 이 논문은 2007년도 '세계 최초의 기후변화 선거'를 치룬 호주를 사례로 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사회정치적 균열에 의해 어떻게 지연되고 곪절되는지를 살펴본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자연, 빈번한 이상기후현상,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 호주 노동당의 정책적 지향은 일련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풍부한 천연자원과 그에 따른 광업의존적 경제구조, 탄소정치경제세력의 저항,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언론, 그리고 '니쁜 정치'는 호주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지연시키고 곪절시켰다. 호주의 사례는 지구적 기후변화, 지역적인 이상기후 현상, 국가산업구조,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집합적 대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특정한 방향으로 묶어내는 정치가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요인과 기후변화 정책과의 인과 관계를 찾기보다는 요인 간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고, 그 생태적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호주정치, 호주 노동당, 기후변화, 탄소배출권 거래, 기후변화 부정기제

* 본 연구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2012년 5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주최 학술대회에서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연세대학교 이희진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ecosoon@gmail.com)

1. 서론

2012년 5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1년도 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10년에 비해 3.2% 증가한 316억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섭씨 6도까지 올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¹⁾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농경이 불가능해지고 빙하가 녹아내리는 등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최대 증가치를 섭씨 2도로 설정한 것과 비교해본다면 현재의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는 일부 정치경제세력과 과학자 집단의 지속적인 부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세계정치경제의 성공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의 급증이라는 ‘인위적인 것’이다.

인위적인 기후변화는 더욱 빈번해지고 강력해진 이상기후현상들(climate change events)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생물종의 대량상실, 가뭄, 홍수, 기근, 물 부족 등의 생·물리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곤란과 혼란을 가중시켜 지역·국가·세계적 수준에서의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누가 또 어떻게’ 완화와 감축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내적, 국제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서 석유·석탄·가스·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한 탄소의존 정치경제 세력의 저항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Neal, 2011: 204~227).

기후변화와 그 사회적 대응의 복잡성은 기후변화가 생·물리·기후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자연과학적 ‘사실’에서의 복잡성과 더불어 기후변화의 원인, 효과, 대응, 비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에서의 복잡

1) <<경향신문>> 2012년 5월 27일자, 「2050년에는 지구 평균기온 6도 가량 상승」.

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된다.²⁾ 기후변화가 지리적 위치,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더불어 산업구조와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기후변화의 대응과 비전 역시 자연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합의와 행동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뿐 아니라 개별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이나 사회정치적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국가는 기든스가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으로 제안한 것처럼 기후변화정책을 선도하는 사회의 여러 다양한 집단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할 수 있어야하고, 탄소배출의 점진적 감축을 통하여 자국의 국민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는 책임국가(ensuring state)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정책이 다른 가치나 정치적 목표들과 긍정적으로 융합되어야하고, 경제적·기술적 혁신들이 기존의 기술들에 비해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Giddens, 2009: 18~20). 문제는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된 책임국가, 그리고 그런 국가의 정치경제적 통합이 국내외적인 상황들에 의해 지연되고 방해받는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회정치적 대응은 이상기후현상의 경험, 산업구조,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여론의 추이, 정치흐름 등 국가 내적인 요인들뿐 아니라, 세계자본주의 정치경제와 국제 분업구조에서의 위치, 국제정치환경 등의 국가 외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 논문은 기후변화와 연관된 이상기후현상의 경험, 산업구조, 기후변화에 관한 여론과 정치적 흐름 등의 국가 내적 요인들이 어떻게 특정 국가의 기후변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호주를 사례로 하여 살펴본다.

2) 환경문제와 환경담론의 복잡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Dryzek(2005) 1장 참조.

호주는 1998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온실가스감축을 전담하는 정부기구인 Australian Greenhouse Office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하워드(John W. Howard, 수상 재임: 1996~2007년)가 이끄는 자유-민족연합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빈번해지고 강력해진 가뭄·열대폭풍·산불(bushfire)·폭우 등의 극단적인 이상 기후 현상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³⁾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의 걸림돌로 간주되었다. 호주의 기후변화 정치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7년도 총선으로, 일부 논자들은 이 선거를 ‘세계 첫 번째의 기후변화 선거’라 부른다(Julian, 2007). 2007년 선거에서 기후변화 대처방안은 ‘WorkChoices’로 대표되는 노사관계 문제와 더불어 핵심 이슈였다.⁴⁾ 선거결과는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장한 러드(Kevin Rudd, 수상 재임: 2007~2010년)가 이끄는 호주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ALP)의 대승리였다.⁵⁾ 러드 수상이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할 만큼 호주는 기후변화에서 ‘책임국가’로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러드 수상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인 탄소감축기획(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CPRS)은 비우호적인 국내외적 여건으로 지연되고 굴절되었다. 이후 노동당은 기후변화 대응책을 포함한 러드 수상의 리더십에 대한 당내 반발로 2010년 6월 길라드(Julia Gillard, 수상 재임: 2010~2012년 7월 현재)가 수상이 되어 선거를 이끌었으나 패배하였다. 선거결과 1940년 이후의 첫 번째 소수정부(hung parliament)를 가까스로 구성하였다.⁶⁾ 이후 길라드 수

3) 호주의 자유민족연합은 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eral National Party of Queensland, National Party of Australia, 그리고 Country Liberal Party로 구성되어 있다.

4) WorkChoices는 1996년 도입된 The Workplace Relations Act를 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Workplace Relations Amendment Act을 의미한다.

5) 2007년 선거 결과 노동당은 60석에서 23석 늘어난 83석을, 자유-민족연합은 87석에서 22석 줄어든 65석을 획득하였고, 무소속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6) 2010년 선거 결과 하원 150석 가운데 노동당과 자유-국민연합은 동일하게 72석

상의 주도로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청정에너지법(Clean Energy Bill)이 2011년 11월 상원을 통과하였지만, 내용에서는 2007년도 러드 수상이 제안한 CPRS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2007년도 선거에 패배하여 야당이 된 자유-민족연합은 애봇(Tony Abbott, 당수 재임: 2009년 12월~2012년 6월 현재)이 당수가 되기까지 넬슨(Brendan Nelson, 당수 재임: 2007년 12월~2008년 9월), 턴벌(Malcolm Turnbull, 당수 재임: 2008년 9월~2009년 12월)로 지도부가 교체되는 내홍을 겪었다. 당수 교체의 핵심 사안은 기후변화 대응책이었다.

2007년의 정권교체, 야당 당수의 연이은 교체, 새로운 수상의 등장과 실각, 2010년 선거에서 노동당의 패배에 보여주는 것처럼 기후변화는 호주의 정치체계를 급격하게 재배치하고(Glover, 2010: 156~158), 그 과정에서 호주의 기후변화정책은 굴절되고 지연되어 왔다. 본 논문은 호주의 기후변화정책의 굴절과 지연을 풍부한 천연자원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기후변화에 취약한 자연적 특징, 기후변화에 대한 여론의 부침(浮沈),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거부하는 언론과 탄소정치경제 세력의 저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Too Much Luck⁷⁾

2012년 5월 OECD는 각국의 주거, 소득, 고용, 공동체, 교육, 환경, 시

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길라드의 노동당은 무소속과 호주녹색당과의 연합으로 76석을 확보하고, 자유-민족연합이 74석을 확보함으로써 노동당 중심의 소수정부(hung parliament)가 구성되었다.

7) Too much Luck은 Paul Cleary가 2011년 출판한 *Too Much Luck: The Mining Boom and Australia Future*에서 따온 것이다. 이 책에서 Cleary는 장기적인 생태·사회·재정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광산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호주 광산부의 문제점과 대안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등 11개 항목을 분석한 ‘행복지수(The 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였다. 호주는 36개국 가운데 1위로서 예상 수명은 82살로 OECD 평균치보다 2년이 많고, 국민의 유급 일자리 비율도 72%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⁸⁾ 이는 호주가 2000~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진국 중 유일하게 경기침체를 겪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호주는 급성장하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자원수출, 시장의 구조적 유연성, 특히 금융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결합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OECD 국가들 가운데 2008년의 금융위기에 가장 잘 대처하고 빠르게 회복된 국가로 평가된다(OECD, 2010: 8). 특히, 호주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업은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방적이고 유연한 경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된다(Economist, 2011).

2011년도 기준으로 호주의 GDP는 세계 13위인 1조 4,882억 미국달러, 1인당 GDP는 세계 6위인 65,477미국달러이다(IMF, 2012).⁹⁾ 2009년도 기준으로 산업은 서비스업이 73.3%, 제조업이 10.1%, 그리고 농림수산업과 광업이 8.6%이다(OECD, 2010: 7). 호주의 광업은 전체 노동력의 약 1.3%인 12만 9천 명을 고용하고 GDP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나, 호주 전체 수출의 35%를 담당하고 있다.¹⁰⁾ 석탄의 경우에는 세계최대 수출국으로서 국제무역의 35%에 해당하고, 철광석, 납, 다이아몬드, 우라늄, 금 등도 주요 생산국일 정도로 천연자원이 풍부하다.¹¹⁾ 풍부한 천연

8) 《연합뉴스》 2012년 5월 23일자, 「호주, 세계 최고 행복국가」.

9)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달러’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호주달러(AUD)를 의미한다.

10) 자료는 호주통계청 웹사이트(<http://www.abs.gov.au/> 2012년 5월 21일 접속). 호주와 비슷하게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서 걸림돌로 간주되는 캐나다와 노르웨이도 수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 캐나다의 경우 광업은 GDP의 3.6%이지만 수출은 32%이고, 노르웨이는 석유산업이 GDP의 19%이나, 수출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11) 호주의 석탄 수출은 일본(39.3%)에 115.3MT, 중국에 42.4MT, 한국에 40.7MT, 인도에 31.92MT, 타이완 26.53MT로 아시아 5개국의 수출물량이 전체의 88%

< 표 1 >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2001~2011)

단위: Mt CO₂-e

연도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총량**
	고정형 에너지	전력	수송	탈루성 배출*				
2001	371.2				27.3	93.7	15.0	507.2
	76.1	184.5	74.6	36.0				
2011	421.2				32.6	78.1	14.2	546.1
	96.5	194.5	87.6	42.6				

* 탈루성 배출(Fugitive emissions)은 물리적으로는 통제되지 않으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온실가스 방출을 가져오는 배출량으로 일반적으로 생산, 수송, 저장과정 및 연료와 기타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며 연결부위, 밀봉부위, 패킹, 가스켓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 온실배스가스 총량은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Forestry)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Quarterly Update of Australia's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December 2011.

자원과 광업에 의존하는 호주경제는 중국, 인도 등의 성장국가들로의 원자재 수출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풍부한 천연자원과 높은 광업의존경제는 값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호주의 정치경제 패턴을 지속시킨다. 정치사회적으로는 “호주의 정치문화가 광업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채굴장 비전에 지배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광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은 탄소감축정책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명분”(Tomaney and Somerville, 2010: 30)으로 활용된다. 또한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시도를 지연시킨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는 2011년도에 총 405MT의 석탄을 생산하였다. 생산된 석탄의 54%가량이 전력생산에 사용되어 전력의 80% 정도이다.¹²⁾ 2011년도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은 흑탄이 53%(108,374.1GWh),

에 이른다(<http://www.australiancoal.com.au/exports.html>: 2012년 6월 20일 접속).

12)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NSW)가 157.4MT,

갈탄이 27%(54,672.4GWh), 가스는 11%(23,057.5GWh), 수력이 6%(12,856.7 GWh)이고, 기타 재생에너지가 3%(6,656.4 GWh)로서 석탄의 비중이 절대적이다(DCCFE, 2011). 전력생산의 높은 석탄의존은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는데, 내수용 석탄생산과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이 온실가스 배출의 42%를 차지하고, 전력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도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5.6%인 194.5MT에 이른다(DCCFE, 2012: 7). 이 때문에 호주는 2011년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546M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다. 1인당 배출량으로 보면 24.3톤으로 미국보다도 높다(Cubby, 2012a).¹³⁾

많은 이산화탄소배출량 때문에 호주는 교토협약에서 부속국가 I 그룹으로 분류되었지만, 에너지 생산에서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여섯 번째로 넓은 영토에서 기인하는 수송·교통의 측면, OECD 평균을 넘는 인구 성장, 토지사용 유형의 지속적인 변화, 수출기반경제, 동아시아 성장국가들과의 강한 무역관계 등(Crowley, 2007: 120~121)을 이유로 2012년까지 의무감축국에서 예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자원 수출 의존형 경제, 그리고 많은 온실가스 배출은 생태적, 지리적으로 취약한 호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호주는 1990년 이후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한 극심한 가뭄, 폭염, 사막화, 산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곤란에 처하였다. 특히 2009년도 세계 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가 세계 6위로서 기후위험지수는 13.17로 사망자 수 572명으로 대부분은 폭염으로 인한 것이었다(Harmeling, 2011).¹⁴⁾

퀸즐랜드(Queensland, QLD)가 157.3MT, 빅토리아(Victoria, VIC)가 117.9MT이다.

13) 2005년도 경우에는 전체 배출량에서 15위이고, 1인당 배출량에서 27.3톤으로 1위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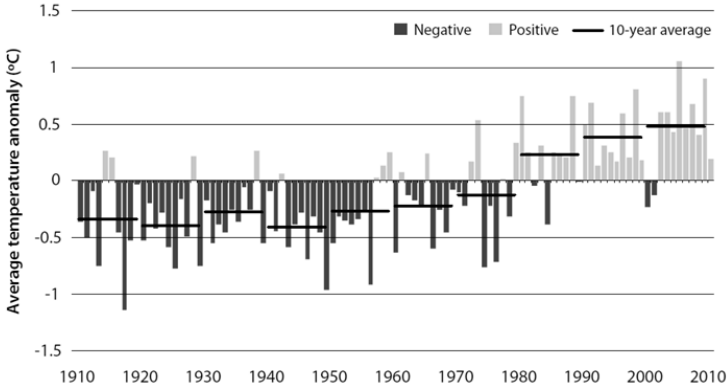
14) 세계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는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미래에 더 자주 또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준비해야하는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기후위험지수 1위는 위험지수 4.33

2008년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주 전역에 영향을 미친 2000년 이후의 대가뭍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Pietsch and McAllister, 2011: 218).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머리-달링 강 유역(Murray-Darling Basin; MDB)의 농업생산물이 92%까지 줄어들고, 대산호초(Great Barrier Reef)의 파괴적 훼손이 일어날 것(Garnaut, 2008)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호주경제의 31%를 차지하는 뉴사우스웨일스(수도는 시드니)의 경우 금세기 말에는 해수면이 1.1m 상승하여 4만에서 6만여 채의 집과 250여 km의 도로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된다(Garnaut, 2011).

그럼에도 호주는 2012년 OECD 19개 나라를 대상으로 평가한 저탄소 경제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취약한 16위(1995년에는 12위)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석탄의존적인 전력생산, 비효율적인 기름사용, 높은 탈삼림화, 저부가가치와 낮은 기술에 의존하는 자원개발에 의존하는 수출이 핵심요인으로 지적된다(Morton, 2012). 가너 리뷰(The Garnaut Climate Change Review, 2008)에 따르면 호주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고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책을 만들어 가는데 처음 몇 년은 120억에서 130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21세기 중반부터는 매년 10억에서 2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기후변화 완화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다는 것이다. 물론 비용이 사회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무역과 배출집중 산업 종사자, 저소득 가계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석탄, 철강, 알루미늄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지만, 연방정부가 의료에 430억 달러, 교육에 180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닐 수 있다(Hetherington and Soutphommasane, 2010: 3~5).

을 기록한 엘살바도르이고, 한국은 위험지수 81.83으로 105위이다. 지난 이십년(1991~2010)의 평균 수치로는 CRI가 54.50로 44위, 사망자 평균은 45.7명이다. 가장 취약한 국가는 방글라데시로서 CRI 8.17이고, 사망자는 연평균 7,814.35명이다.

<그림 1> 호주의 연평균 기온 변화



* 이 자료는 1961~1990년 사이의 연평균 변화를 보여준다.

자료: Bureau of Meteorology time series data, retrieved 10 February 2011.

그러나 2007년 정권교체 이전까지 호주 정부는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또 국내적으로 뚜렷한 기후변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2007년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 정부의 리더 수상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면서, 2050년까지 2000년 기준으로 60%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2010년까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3. 일상화된 이상기후현상

지구온난화로 지난 100년간 지구의 표면온도가 섭씨 0.7도 증가한 것에 비해 호주는 1910년을 기준으로 섭씨 1도가 증가하였는데, 1980년대 이후 그 상승속도가 지속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상승한 기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이면 호주는 또다시 섭씨 1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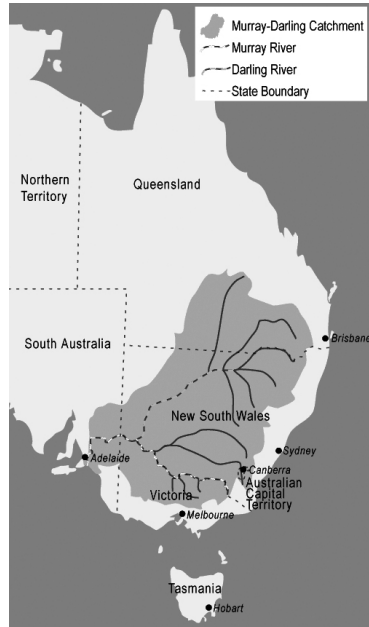
가뭄은 20% 이상 증가하고, 고온과 심각한 산불의 가능성이 25% 증가할 것이다. 도시에 물 제한이 이뤄지고 농업도 위협에 처할 것이다.¹⁵⁾ 실제로 호주는 2000년 이후 10여 년 지속된 역사상 최악의 대가뭄을 겪었고, 폭염, 산불, 열대폭풍, 홍수 등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2012년 5월의 시드니는 153년 만에 가장 건조한 가을이었다. 기온은 평균보다 2.7도가 높은 섭씨 22도를 기록했고, 건조하고 맑은 날씨의 연속이었다(Murphy and McNeilage, 2012). 덥고 건조한 날씨와 그에 따른 가뭄과 물 부족은 호주가 오랫동안 써온 해운 핵심적인 환경문제이다. 호주는

대륙 중간에 이용 가능한 강과 수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구의 80%가 해안으로부터 5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호주에서 심각한 가뭄은 연방 대가뭄(the Federation drought; 1895~1903),¹⁶⁾ 2차 세계대전 기간(1939~1945), 그리고 새천년 대가뭄(the Millennium Drought, 2001~2010)이다. 새천년 대가뭄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06~2007년의 정점을 거쳐 2010년 하반기에서야 끝났는데, 퀸즐랜드에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호주대륙의 중동부에서부터 남서쪽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가뭄의 영향은 머리-달링 강 유역에서 두드러졌다(<그림 2> 참조). 머리-달링 강 유역은 퀸즐랜드(QLD), 뉴사우스웨일스(NSW), 사우스오스트

<그림 2> 머리-달링 강 유역도



15) <http://www.climatechange.gov.au/en/climate-change/impacts.aspx>

16) 1895년부터 1903년까지 지속된 대가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이 연방정부 수립(1901년)의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

레일리아(South Australia, SA), 빅토리아(VIC),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주요 도시들인 시드니(Sydney), 멜버른(Melbourne), 애들레이드(Adelaide), 캔버라(Canberra)를 포함한 호주 동부, 동남부, 남부 지역을 포괄하는 광대한 영역으로 호주 개간지의 65%, 전체 농산물의 40%를 차지한다.¹⁷⁾ 가뭄으로 해당 지역의 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느린 유속 때문에 수질 오염도 더욱 악화되었다. 부족하고, 또 오염된 물은 물 사용과 관리를 둘러싼 주정부 간,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머리-달링 유역은 실제로 누가 어느 정도나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주, 지역, 산업, 작물에 어느 정도의 물을 배분할 것인지, 또 강과 하천의 생태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치는 얼마나 되는지,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농업과 농촌공동체의 피해와 관광, 지역생태계 등에 미친 영향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다(Lloyd, 2010). 원활한 물의 사용과 관리, 이와 연관된 도시와 농촌공동체의 대응, 농촌/업의 구조조정,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The Murray-Darling Basin Commission이 설립되었다.¹⁸⁾ 그러나 2006년 11월, Murray-Darling Basin Commission의 위원장(D. Dreverman)이 당시 하워드 수상에게 천 년 빈도의 가장 심각한 가뭄이고, 지구온난화와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하워드는 그 어느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 수상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도 못하였다(AAP, 2006).

대가뭄에 대한 사회정치적 대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농부들처럼 치

17) 머리(Murray) 강은 2,995km이고, 달링(Darling) 강은 1,472km이다.

18) 위원회는 1992년 Murray-Darling Basin Agreement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으며, 기원은 1915년에 체결된 the River Murray Waters Agreement까지 거슬러간다. 2008년 12월 1일부터 The Murray Darling Basin Authority로 바뀌었다. 머리-달링 유역의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와 구체적인 내용은 MDB Commission (<http://www2.mdbc.gov.au/>), MDB Authority(<http://www.mdba.gov.au/>) 홈페이지 참조.

명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가뭄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을 탄소기반 경제의 가능한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한다는 것이다(Alston and Whittenbury, 2011: 900). 이는 연방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도입하고, 기후변화와 그 대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참여나, 사회적·경제적 결과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정부가 물 사용의 우선권을 농장과 농촌공동체로부터 환경과 도시로 이동시킴으로써 농촌공동체의 복원력(resilience)과 적응능력의 쇠퇴를 야기하였다(Alston, 2010). 특히 관개농업이 치명적인 영향을 입었는데, 농부들은 면허를 지녀야만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 쓸 수 있는데, 작물에 따라 설정된 물 할당량이 다르고, 끌어 쓴 물의 양이 아니라 면허 자체에 세금이 매겨졌기 때문에 농촌공동체의 저항이 더욱 거셌다(Alston and Whittenbury, 2011: 901).

호주 대륙 전체를 뜨겁고 건조하게 만들어 물 부족을 초래한 새천년 대가뭄은 라니냐(La Nina)¹⁹⁾의 등장으로 해소되었다.²⁰⁾ 그러나 라니냐는 2011년 2월, 퀸즐랜드 주에서는 한반도의 6배가 넘는 지역에 홍수를 야기한 태풍 야시(cyclone Yasi)를 수반하였다.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굳까지 동원하여 대처하였으나 천문학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엄청난

19) 엘니뇨와 반대현상을 보이는 라니냐 현상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5개월 이상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서, 호주, 파푸아 뉴기니(PNG), 인도네시아 등지에 더 많은 구름이 유입되어 폭우를 야기한다. 엘니뇨(El Niño)와 라니냐는 일정한 주기를 보이는데, 엘니뇨가 지배적인 기간에는 호주에 극심한 가뭄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폭우와 홍수가 나타난다. 문제는 주기적인 이 현상이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더욱 강해짐으로써 호주에 가뭄, 폭우, 홍수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20) 2012년 4월 연방농업장관이 공식적으로 호주에는 더 이상 가뭄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가뭄해소 선언은 다행스러운 사안이지만, 오랫동안 가뭄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농업에 취해졌던 낮은 이자율, 연방정부가 농장과 중소사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서,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농업과 농촌공동체에 또 다른 위기를 야기한다. 호주정부는 2010년 9월까지 45억 달러의 보조금을 농장과 중소사업체에 지급하였다(Howden, 2012a; 2012b).

재난지역의 복구경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연방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홍수세(flood levy)까지 도입하였다.²¹⁾ 최근의 호주를 강타한 열대태풍(cyclone)은 야시(Yasi, 퀸즐랜드, 2011년 2월, 피해액-96백만 달러), 조지(George,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2007년 3월, 피해액-8백만 달러), 래리(Larry, 퀸즐랜드, 2006년 3월, 30명 사망, 피해액-5천4백만 달러) 등이다. 열대태풍과 더불어 홍수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빅토리아 주(2011년 1월, 피해액-114백만 달러), 뉴사우스웨일스와 ACT(2012년 1월, 3명 부상, 피해액-108백만 달러), 퀸즐랜드(2012년 1월과 3월, 2명 사망, 피해액-124백만 달러; 2010년 11월~2011년 1월, 37명 부상, 피해액-23억 달러) 등으로 호주 대륙의 동부해안을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²²⁾

폭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와 빅토리아 주에서 2011년 12월과 1월 사이에 45명이 사망하였고, 2009년 1월에는 374명이 사망하였다. 최근 호주가 경험한 최악의 자연재난은 ‘검은 토요일(Black Saturday)’로 불리는 산불(bush fire)이다. 빅토리아 주에서 2009년 2월 7일과 8일 이틀간 발생한 산불로 173명이 사망하고, 414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액은 약 10억 달러에 이른다. 2010년 이후 사상자가 발생한 산불만 해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2011년 5월, 12명 부상, 35백만 달러; 2007년 12월~2008년 1월, 사망 3명), 빅토리아(2006년 12월~2007년 1월, 사망 1명, 부상 1,400명, 피해액-14백만 달러; 2005년 12월~2006년 1월, 사망 4명, 부상 6명, 피해액-22백만 달러),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2005년 1월, 사망 9명, 부상 110명, 피해액-27백만 달러), ACT(2003년 1월, 사망 4명, 부상 492명,

21) 홍수세는 태풍 야시의 피해를 입은 공동체의 복구지원을 위해 연방정부가 Temporary Flood and Cyclone Reconstruction Levy(the flood levy)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였다.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적인 세금으로 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한하여 부과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to.gov.au/content/00276059.htm> 참조.

22) 열대태풍, 홍수, 폭염, 산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정부 재난지원 웹사이트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Assist website; <http://www.disasterassist.gov.au>) 참조.

피해액-350백만 달러) 등 호주의 동부와 남부 해안을 따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빈번하고 강력해진, 대가뭄, 폭염, 산불, 폭우, 열대태풍은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예측된 영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Garnaut, 2011: xi). 기후변화는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와 동시에 고온 건조한 기후와 취약하고 민감한 자연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별한 개간과 관개, 도시로의 인구 급증 때문에 야기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기후변화와 연관된 일상화된 자연재난, 토양 악화와 사막화, 생물종 다양성 상실 등과 같은 환경문제는 호주의 사회정치적인 균열과 대립을 낳고, 바로 그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또한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지난 십여 년 간 호주에서 기후변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과 조정의 문제는 정권교체뿐 아니라 정당 수뇌부 교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 기후변화 여론의 부침과 ‘경제적 광기’

호주가 경험하는 일상화된 이상기후 현상과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하워드가 이끄는 자유-민족연합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국내외적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호주의 대응방식은 2007년 선거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였다. 또한 2010년 선거 역시 길라드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2007년에는 고용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급격히 그 중요도가 낮아졌다. 기후변화와 고용의 중요성을 비교한 자료(<표 2> 참조)에 따르면 2007년도에는 기후변화가 고용만큼 중요하였으나, 2011년에는 고용의 중요성(81%)과 비교하였을 때 기후변화 대처의 중요성(46%)은 현격

<표 2> 연도별 기후변화와 고용의 중요성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Tackling climate change	75%	66%	56%	53%	46%
Protecting the jobs of Australian workers	75%	79%	80%	79%	81%

출처: Hanson, 2011: 18.

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7~2008년 기후변화에 대한 호주인들의 높은 관심은 2006년 영화 <불편한 진실>의 상영, 엘 고어의 2007년 9월 호주 방문, 스티븐(Sir Nicholas Stern) 보고서 출간, IPCC 4차 보고서 발간 등과 더불어 2000년 이후 지속된 극심한 가뭄, 산불, 홍수, 열대태풍 등의 이상 기후현상이라는 구체적인 경험이 보다 세계적이고 추상적인 ‘기후변화’를 현실의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²³⁾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식, 건강, 개인의 경제적 안녕, 사회복지 등에 관한 것으로 급격하게 이동하였다. 반면 환경, 세계적 안보, 지구적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줄었다. 특히 환경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산업오염,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원고갈에 대한 관심은 2007년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고, 벌목과 서식지 파괴만이 25위 안에 들어있다(Devinney 외, 2012).

2009년도의 최악의 빅토리아의 산불, 시드니의 먼지 폭풍, 2010~2011년의 퀸즐랜드를 포함한 중동부해안 지역의 폭우와 홍수와 같은 이상 기후와 연관된 자연재난(natural disaster)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환경이슈의

23) 구체적인 이상기후현상은 사람들의 기후변화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2012년 6~7월 워싱턴을 포함하여 미국 동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폭염과 산불로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미국인들의 기후변화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Sydney Morning Herald 2012년 7월 10일자, “Heatwave in the US turns climate sceptics”).

< 표 3 > 호주인의 가치 변화

범주	2007	2011	변동폭
Food and Health	64%*	72%	+8
Local Crime and Public Safety	68%	67%	-1
Rights to Basic Services	66%	65%	-1
Civil and Personal Liberties	57%	60%	+3
Equality of Opportunities	54%	57%	+3
Individual Economic Well-Being	51%	56%	+5
Worker/Employment Rights	58%	55%	-3
Societal Economic Well-Being	43%	46%	+3
Global Security	42%	46%	+4
Societal Social Well-Being	43%	46%	+3
Global Economic Well-Being	44%	45%	+1
Depletion of Energy/Resources	33.38%(25)**	32.05%(31)	
Animal Welfare	42%	41%	-1
Global Social Well-Being	42%	38%	-4
Minority Rights	31%	32%	+1
Commercial Rights	22%	23%	+1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64%	53%	-11
Deforestation and Habitat Destruction	38.48%(13)	33.54%(24)	
Industrial Pollution	42.15%(5)	32.16%(30)	
Alternative Energy generation	41.21%(8)	29.46%(41)	
Recycling of Materials	30.62%(34)	27.99%(43)	
Climate Change	38.56%(12)	25.45%(51)	
Biodegradability of Materials and products	21.65%(70)	23.32%(64)	
Loss of Biodiversity	20.44%(74)	21.91%(74)	
Personal Pollution	20.47%(73)	15.01%(89)	
Ancillary Pollution	29.98%(40)	14.90%(90)	

* %는 중요성을 의미 100%에 가까울수록 중요.

** 순위는 113개 항목 가운데서 중요한 정도로 1에 가까울수록 중요함.

자료: Devinney 외, 2012: 48~54에서 재구성

일상화(routinization)의 효과라 할 수 있다. 환경이슈의 일상화는 정치참여의 비전통적인 형태에서 정치적 주류로 진입, 그리고 기존 제도로 사회적 혁신이 흡수되는 것을 수반한다(Tranter, 2011: 80). 다음으로는 연방정

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미숙함이다. 이는 노동당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39%가 아주 못함, 36%는 못함, 20%가 잘함, 그리고 3%만이 매우 잘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Hanson, 2011: 8).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의 급격한 부침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요인은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호주의 언론이다. 호주는 대단히 민주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자유를 위한 국경 없는 기자’에서 발표한 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 2011~2012)는 30위에 해당한다.²⁴⁾ 이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다양성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호주 언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TV방송의 이중체제와 언론의 소유권 집중이라 할 수 있는데(Jones and Pusey, 2008), 언론의 소유권 집중이 언론자유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짐을 의미한다.²⁵⁾

호주언론은 Fairfax Media²⁶⁾와 News Corporation으로 양분되어 있다. Fairfax Media는 2007년 9월 Rural Press와 합병하여 자산규모 90억 달러의 거대 미디어 그룹으로 재탄생했다.²⁷⁾ 이 합병으로 Fairfax Media는 Sydney Morning Herald와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The Age, The Rural Press 등의 170개 지역과 대도시 신문, 60개의 농업출판물, 그리고 The Canberra Times를 소유하게 되었다.²⁸⁾ Fairfax Media의 경우, 세계적인

24) 이 조사에서 한국이 44위이고, 호주의 경우 2004년도에는 41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호주언론의 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 ‘정보자유를 위한 국경 없는 기자회’의 Press Freedom Index 2011/2012의 홈페이지 http://en.rsf.org/spip.php?page=classement&id_rubrique=1043 참조.

25) 호주의 방송국은 공영방송인 The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ABC)와 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SBS)와 나머지 상업방송국으로 분류된다.

26) Fairfax Media는 John Fairfax가 1841년 Sydney Morning Herald를 인수하면서 설립되었다.

27) Fairfax Media는 National Dailies(2개), Metro Dailies(4개), Regional Publications(6개), NSW Communities(12개), VIC Communities(25개), Magazines(21개), Financial Review Group online(7개), Fairfax digital(1개)을 소유하거나 제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adcentre.com.au/> 참조.

28) *The Age* 2007년 5월 9일자.

기후변화 협상을 지지하고 호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책을 모색하도록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2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전설적인 광산거물로 알려진 헨콕(L. Hancock)의 딸인 라인하트(Gina Rinehart)의 Hancock Prospecting이 Fairfax Media 지분의 10%를 인수하면서 Sydney Morning Herald나 The Age 등의 논조가 News Corporation과 유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라인하트는 공개적인 기후변화 회의론자로서 2011년에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회의론자이자 영국의원인 몽크톤(Christopher Walter Monckton)의 호주방문을 지원하였다. 라인하트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연방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지지하고, 호주 북서해안에 항구를 만들기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도 했다. 그녀는 호주의 미래는 제조업이 아니라 중국에 더 많은 자원을 공급하는 광업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호주정부가 자원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Fairfax Media의 지분을 획득했다고 밝혔다(Rourke, 2012).

Fairfax Media 계열이 기후변화 대응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에 비해 세계적인 언론재벌인 머독(R. Murdoch)의 News Corporation은 기후변화에 대한 거부와 회의적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²⁹⁾ News Corporation 계열이면서, 호주 유일의 전국적 일간지인 The Australian은 시장근본주의, 기후변화에 대한 최소대응, 호주 원주민 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최소개입, 이슬라엘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 정치적·도덕적 상대주의에 대한 거부, 그들이 좌파라 간주하는 ABC와 Fairfax에 대한 지속적인 폄하로 잘 알려져 있다. 호주에서 기후변화부정기계(climate change denial machine)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The Australian은 ‘반과학캠페인(anti-science campaign)’을 벌이고,³⁰⁾ 기후변화에 관한 가짜 전문가

29) 머독의 News Corporation은 The Australian and Information(6개), Metropolitan Newspapers(7개), Sunday Papers(7개), News in Education(6), Regional and Community Papers(13개), Newspaper Archives(2), Lifestyle(8개) 등을 소유하고 있다.

를 진짜인 것으로 포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고, 동일한 인물을 반복적으로 중요 인물로 노출시키고 있다.³¹⁾ 기후변화 관련 사실에서는 기후변화는 환상이고, IPCC의 1,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4차 보고서에서 발견된 2개의 에러에 대한 4번에 걸친 사실을 통하여 과학적 증거가 세계적으로 의문시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과학자공동체 내부에서 인정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흐리면서 교토협약을 ‘광기’와 ‘쓰레기’로 묘사하였다. 이들은 호주 정부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2010년, 자유민족연합의 애벗(T. Abbot)이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s; ETS)의 상원 통과를 무산시키자, 러드 수상이 호주를 궁지로 몰아가면서 무모하게 호주의 경제를 위협에 노출하는 것을 야당이 막아냈다는 찬사를 보였다 (Manne, 2011a; 2011b). The Australian은 기후변화 정책의 거부와 회의론을 부각시키기 위해 호주의 가장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싱크탱크인 IPA(the Institute of Public Affairs)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IPA의 스태프는 The Australian에 정기적으로 여론, 시론 등에 기고하여 사람들이 기후변화 과학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 신문과 방송에 ‘전문가’로 출현하였다. 이들이 주로 사용한 수사는 지대를 추구하는 (rent-seeking) 사기꾼으로서 기후학자, 종교적·정치적·경제적 음모로서 기후변화 대응책, 좌파의 음모로서의 기후과학, 새로운 사회주의로서 환경

30) 기후변화부정기계(Climate change denial machine)는 기후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각하지 않고, 그것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부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가 실행 필요하다하더라도 최소의 수준에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전제하에 보수적인 싱크탱크, 석유·철강·자동차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업, 보수적인 풀뿌리 시민단체, 언론, 인터넷의 블로거 등이 서로의 주장을 인용·강화하면서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체계로서 탄소기업과 보수적인 재단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Dunlap 외(2011)와 Jacques 외(2008) 참조.

31) Climate Guest Blogger(2011.8.31) Scientist: “The Murdoch Media Empire Has Cost Humanity Perhaps One or Two Decades in Battle Against Climate Change.” Think Progress 홈페이지 참조(<http://thinkprogress.org>)

주의 등이다(McKewon, 2012).

5. 정치적 길항과 기후정책의 굴절

자유-민족연합의 하워드가 집권하는 시기 동안(1996~2007년) 기후변화 정책은 일자리를 줄이고 값싼 화석연료에 유리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생활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지체되었다(Pietsch and McAllister, 2011: 219).³²⁾ 산업부문과 이들과 연루된 정치 세력의 저항과 거부로 기후변화에 대응에 필요한 (생태적) 구조조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토의정서 비준도 거부하였다(Curran, 2009). 그러나 2007년 총선에서 러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우리 시대의 위대한 도덕적, 경제적 도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³³⁾ 총선에서 승리한 러드 수상은 취임 직후 교토의정서에 서명하고 2050년까지 탄소감축계획인 탄소감축기획(CPRS)을 발표하였다.³⁴⁾ CPRS에 따르면 온실 가스를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5~25%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60%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CPRS는 무엇보다도 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도입에 대한 저항 때문에 무산되었다.³⁵⁾

32) 하워드 정부의 주된 정책은 텔스타(Telsta)의 민영화, GST 도입, 의료·복지·사회서비스 재정축소, WorkChoice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기반 산업관계의 개혁 등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워드는 지속적으로 소수자 권리에 대한 무시, 대의민주제도에 대한 불신과 공동체의 냉소주의 조장, 야당의 반대목소리 억압 등과 같이 호주 민주주의의 쇠퇴를 야기했다고 평가된다(Wear, 2008).

33) ‘우리 시대의 위대한 도덕적, 경제적 도전’이라는 표현은 러드가 2007년 3월에 개최된 The National Climate Change Summit의 개막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Burgmann and Baer, 2010).

34) 기획안은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목표(RET; Renewable Energy Target)안과 연동되어 제안되었는데, RET 법안은 통과되었다.

2008년 여론조사 결과는 호주국민 대다수가 ETS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정책을 지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원에서 표결권을 지닌 여전히 의미 있는 소수가 ETS를 반대하였다. 핵심적인 이유는 기후변화가 정말 인위적인지, ETS와 같은 제도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ETS와 같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중들의 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충분히 잘 하고 있다는데 회의적이었다(Pietsch and McAllister, 2011).

게다가 러드 정부가 CPRS 도입의 정당성의 근거로 코펜하겐에서의 국제사회의 의미 있는 협력과 그 과정에서 호주의 주도적인 역할을 제시하였지만, 코펜하겐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정책추진의 정당성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었다(Baily외, 2011: 8). 특히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 배출국의 비슷한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호주의 배출감축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무용론이 대두되고, 에너지 집약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반대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갔다. 특히 퀸즐랜드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자원 의존적인 주정부뿐 아니라 해당 주의 반대 여론은 심각하였다(Baily 외, 2011: 9). 러드 수상은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의 의미 있는 합의의 결렬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ETS 추진하지 않는다는 상황과 더불어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2010년 4월에 ETS 도입을 2013년까지는 연

-
- 35) 호주의 기후변화 정치가 ETS 도입을 둘러싸고 진행되었지만, ET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어느 정도나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는 논쟁거리이다. 정부가 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면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을 하지만, ETS를 도입하여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기 쉽다. 또한 대부분의 ETS 당사자는 주요 기업에 국한되는데, 온실가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정과 공공부문의 빠져있다. 또한 배출권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배출권시장이 브로커들이 이해관계 실현의 장소로 바뀐다. 교토의정서의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정과 그 효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Neel(2011: 238~326)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부터 1월부터 시행예정이다. 2020년까지 배출권전망치(BAU)의 30% 감축이 목표이다.

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 직후에 이뤄진 여론 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은 노동-연합 양당선호에서는 35% 대 43%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고 러드의 수상직에 대한 만족도 역시 39%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 호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호주는 탄소감축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Griffiths, 2010: 630). 러드의 노동당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여론과 국민적 지지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2007년 선거패배 이후 야당이 된 자유-민족 연합의 지도부는 노동당이 제안한 ETS에 대한 내부 이견의 조정 실패로 당수가 세 차례나 교체되었지만, 지배적인 흐름은 러드의 CPRS에 대한 반대이다. 특히 대표적인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애벗은 러드의 ETS 방안을 “모든 것에 대한 엄청난 세금(Great big tax on everything)”이라고 비난하면서 2020년까지 5% 감축을 정책으로 선택하였다. 애벗의 자유-민족연합과 더불어 탄소의존 기업들은 국제금융위기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가격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당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야기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호주가 조치를 취하지만 세계적인 배출은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였다.³⁶⁾ 이들은 각종 인쇄물, 텔레비전과 온라인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이 호주경제에서 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탄소세와 광물자원세(MRRT, The Mineral Resources Rent Tax)에 대한 거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탄소세는 석탄 1톤당 1.6달러만을 증가시켜 효과가 미미하고, 수출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로비를 진행하였다(Greenpeace, 2011).

CPRS와 더불어 2010년 러드 수상 당시 노동당에 의해 제안된 MRRT

36) 핵심 기업은 the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the Association of Mining and Exploration Companies, the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Australian Coal Association, the Australian Trade and Industry Alliance를 포함하여 석탄채굴기업, 철강과 알루미늄생산기업, 그리고 석탄발전소 등이다.

역시 탄소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MRRT는 자원과 광산 붐의 이득을 호주경제전역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2010년 입안되었다.³⁷⁾ 초과이윤을 얻는 2,500여 광산과 원유기업에 이윤의 4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업가들도 기본적으로는 광산붐의 분배라는 정책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노동당 정부가 해당 주나 기업들과의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였다. 이들은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이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러드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정책결정에 대한 비판을 담은 광고를 냈다. 러드 정부 또한 기업광고에 대한 반대광고를 제작하는 등 홍보비용으로 3천8백만 달러를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루지 못한(good idea, badly handled)’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Yeates, 2012).

2010년 초반부터 노동당 내부에서 러드 수상의 국정운영과 지도력에 대한 불만과 이견이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주된 이유는 당의 공식적인 정책결정 이전에 러드 수상의 개인 집무실에서 먼저 결정이 이뤄지거나 내각 내부의 또 다른 내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과의 미숙한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결정 등에 대하여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혹자들은 러드 수상의 통치스타일을 정책홍보형 수상(Campaign driven PM)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였다. 2010년 6월 러드 수상으로부터 수상직을 이어받은 길라드(Julia Gilliard; 2010~2012년 7월 현재)는 러드 수상과 정책에서의 큰 차이는 없지만 통치스타일은 더 상의하고(consultative), 더 단호하고, 개혁에 더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하게 처리할 문제로 광업에 대한 초과이윤세의 조정, 호주로의 난민에 대한 보다 단호한 입장,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제시하였다(Wana, 2010).

길라드 정부가 탄소감축과 지구온난화 대응책으로 제시한 청정에너지

37) MRRT는 2012년 3월에 상원을 통과하였고(찬성 38, 반대 32),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하여 녹색당은 금, 우라늄, 희토류 등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그 비율도 40%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법(Clean Energy Bill)이 2011년 상하원을 통과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정에너지 법은 러드 수상이 추진했던 CPRS에서 많이 후퇴한 것이다. 청정에너지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2000년 기준으로 5% 감축하거나 온실가스를 159MT 감축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과 임업 기업을 제외한 500개 기업에만 해당되는 탄소배출권 거래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시장에의 거래를 목표로 하고, 2012년에는 탄소 1톤당 23달러로 책정하였다. 청정에너지법에 대하여 자유민족연합의 애벗 당수는 노동당이 환경주의를 가장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펴는 것이라 비판하고, 자신들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법안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기업단체와 광산업 쪽에서는 길라드의 정책이 호주의 번영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녹색당(지지자)은 5% 감축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25~40%의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ercer, 2011). MRRT의 경우에도 러드 수상이 제안한 초과이윤에 대한 40%의 세금에서 길라드 수상이 BHP, Rio and Xstrata 등의 거대 광산기업과의 협상으로 초과이윤 30%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해당 부문도 석탄과 철광석 기업으로 국한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이처럼 호주에서의 기후변화, 그리고 그와 연관된 것으로 가정되는 폭염, 홍수 등의 기상이변은 정권교체, 정당 내부의 권력교체, 그리고 시민들의 정당지지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만큼 결정적인 사안이다. 호주는 경제구조가 저비용 화석연료의 풍요로움에 기반을 둔 나라 가운데 하나로써, 여전히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가장 큰 장애물로 평가된다. 물론 호주산업계에서는 이런 주장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노력을 과장하는 것이고, 석탄(수출)에 의존하는 호주 경제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한다.³⁸⁾ 정당 간, 그리고 정당 내부의 기후변화

38) 산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The Australian Industry Greenhouse Network' chief executive, Michael Hitchens와 The Minerals Councils of Australia의 주장을 참고(*The Australian* 2011년 2월 7일자).

에 대한 입장 차이는 정치가와 정당들의 정책과 이념의 차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대표한 산업적, 사회적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과 그 대응책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균열은 이념, 정책,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또 그 차이를 반영한다. 이런 차이들을 조정하면서 ‘탄소배출의 점진적 감축을 통하여 자국의 국민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는 책임 국가’로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과제는 정치의 문제이다. 2007년 정권교체 이후 노동당은 ETS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0년 선거에서는 노동당과 자유-민족연합은 모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경쟁하는 중이라고까지 표현된다.³⁹⁾ 2007년 노동당의 집권 이후 기후변화정책은 술한 사회적 균열과 논쟁에 비추어볼 때 그 결과는 미약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호주의 기후변화정치 특히, 노동당의 정치는 ‘나쁜 정치’에 가깝기 때문이다. CPRS나 청정에너지법의 근거인 가너 리뷰(Garnaut Review)는 수백 개의 표·그래프·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는 국민들도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하였고, 감동적인 줄거리가 없는 사실(facts devoid of an inspiring storyline)의 나열이 대부분이었다. 유력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정책을 (과학자들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제시된 기후변화 대응책은 탄소기업, 환경주의자, 노동자 그 누구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적당히 애들러진 형태였다. 이는 두 번이나 CPRS가 상원에서의 거부되었을 때 애벗(T. Abbott)이 이끄는 자유-국민연합은 그것을 ‘엄청난 새로운 세금’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녹색당은 그것이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정책시행을

39) 2010년 총선 이슈는 입헌군주제, 연방제, 중국과의 자원인적 교류, 기후변화, 선거제도, 원주민과의 관계, 산업관계, 이주, 난민 등이다. 그러나 러드의 통치 스타일, 빈약한 성취, 광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등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Sydney Morning Herald는 2010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 15개를 연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mh.com.au/federal-election/agenda> 참조.

위한 산업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비용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정부는 구조개혁의 과정, 비용의 분배, 개혁으로부터 얻는 이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 없이도 ETS 도입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만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는 하워드 정부가 WorkChoices 정책에 대하여 ‘누구도 나빠지지 않을 것’만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2007년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과 유사한 형태이다 (Hetherington and Soutphommasane, 2010: 3).

2007년 이후 기후변화를 둘러싼 노동당과 자유-보수연합의 길항, 그리고 탄소기업계의 저항과정에서 호주녹색당의 성장과 선전은 주목할 만하다.⁴⁰⁾ 흔히 녹색당을 단일 이슈를 주장하는 대단히 이념적이고 급진적인 정당이라고 간주하지만, 호주 녹색당은 정당의 정책과 조직운영에서 강한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급진적 유토피아주의자라기보다는 명민한 정치적 행위자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Miragliotta, 2006). 호주녹색당은 1990년에서 2004년까지 하원에서는 3.5% 이상을 상원에서는 4% 이상의 지지를 꾸준히 받아오면서 실질적인 제3당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 선거에서 반트(Adam Bandt, Melbourne 지역)가 하원에 입성하였고, 2011년 9명의 상원의원을 확보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당 지지층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녹색당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당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호주의 환경단체 가입(의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 2001년, 2007년을 비교해

40)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정의, 자연보호, 평화/반폭력을 주창하는 호주 녹색당(Australia Greens)의 뿌리는 1972년의 타스마니아(Tasmania)의 Franklin River 댐 반대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엘리트층 중심으로 한 자연보존이 주된 이슈였다면, 1980대와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이상기후 패턴, 독성오염, 기름유출, 시드니의 물 오염 등이 의제화되는 환경사회운동으로 성장하였다. 호주의 환경정치(지지자들은 가뭄·홍수와 같은 이상기후, 발암성 복사열 노출, 천연림 벌목, 토착 동·식물의 멸종 등과 같은 녹색(green) 이슈, 건강과 웰빙을 위협하는 오염, 독성 유출, 생태적 위협과 같은 갈색(brown) 이슈를 따르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녹색 이슈의 청중이 보다 젊고,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Pakulski and Tranter, 2004: 223).

보면 이미 회원인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1.2%, 5.4%, 7.2%, 회원가입을 고려하는 비율은 각각 10.2%, 20.8%, 2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Pietsch와 McAllister, 2011: 105). 소수당 정부인 현재의 정치적 지형에서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책에서 녹색당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그 정책적 지향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6. 결론

하워드의 자유-민족연합 정권에서부터 현 노동당 정권까지 호주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은 지연되고 굴절되어왔다. 2000년 이후에 지속된 대가뭄, 폭염, 홍수, 산불과 같은 이상기후현상에 따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은 호주가 탄소감축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생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Paterson(2006)이 지적하였듯이 특정 국가의 에너지 토대와 기후변화정책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수입국가는 상대적으로 강한 생태적 구조조정에, 에너지 수출국은 그 역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풍부한 천연자원과 석탄을 포함한 값싼 에너지 공급에 기반한 비교우위와 역동적인 아태지역의 에너지 시장과의 밀접한 관계는 생태적 구조조정으로의 이행필요성을 약화시키고, 현 상태에서의 기술적 조정(technical fix)을 선호하게 만든다. 호주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의 지연과 후퇴는 현재의 정치경제적 이득을 유지하고자 하는 탄소정치경제 세력의 저항과 로비, 그들과 연관되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 특히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머독의 News Cooperaton이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위대한 도덕적, 경제적 도전’이라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적 담론 가령, 자원과 개척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에서 자연과의 공존으로의 이동과 이를 위한 생태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발

전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회적·정치적 균열을 생태적 방향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미숙한 정치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다.

호주의 풍부한 천연자원, 그에 따른 높은 광업의존형 수출경제, 빈번한 이상기후현상,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그리고 기후변화 선거와 정권교체는 특정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양식이 과학적 ‘사실’과 사회적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사회정치적 조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지구적 기후변화, 지역에서 경험하는 이상기후 현상들의 원인과 영향,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와 경제적 특징,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집합적 대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특정한 방향으로 묶어내는 정치적 능력이 모두 특정 국가의 기후변화대응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하나의 요인에서 단선적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요인들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각각의 고리에서의 생태적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 Abstract

Climate change and socio-political cleavages in Australia

Park, Soon-Yawl

Even though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urgent, it would be delayed and bent because of the complexities of natural scientific facts and the conflicts of stakeholder's interest. This paper explores how the climate change policy is be delayed and bent focusing on Australia, which has 'world first climate election' in 2007. The situations including the vulnerable nature to climate change, frequent climate change events, high national concern on climate change, and the Australian Labour Party's policy orientation is remunerative terms to the climate change policies. But the rich natural resource, economic structure deeply reliant on mining industry, resistance of the carbon political economic forces, mass media aggravating climate denial, and 'bad politics' delayed and bent them. The Australian case shows that global climate change, local climate change events, national industrial structure, people's concern and attitude on them, and the politics impact on the climate change polices all together. So we need to find out the linkages among them,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ecological transformation of the link.

Keywords: Australian politics, Australian Labor Party, climate change, emission trading scheme, climate denial machine

참고문헌

- Alston, Margaret and Kerri Whittenbury. 2011. "Climate change and water policy in Australia's irrigation areas: a lost opportunity for a partnership model of governance." *Environmental Politics*, 20(6).
- Alston, Margaret. 2010 "Gender and climate change." *Journal of Sociology*, 47(1).
- Attorney-General's Department Disasters Database 웹사이트: <http://www.disasters.ema.gov.au/Default.aspx>
- Australian Associated Press(AAP)*. 2006.11.7. "Drought declared 'worst in millenium'" *The Age*.
- Baily, Ian, Hugh Compston and Iain MacGill. 2011. "The demise of the Australian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A Political Strategy analysis." Presented paper to the 6th ECPR(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General Conference. Reykjavik Iceland(2012년 5월 3일 접속).
- Bulkeley, Harriet. 2000. "Discourse coalition and the Australian Climate change network."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18.
- Burgmann, Verity and Hans Baer. 2010. "The World's first climate change election." Australian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2010 Conference.
- Clearly, Paul. 2011. *Too Much Luck: the mining boom and Australia's future*. Black Inc. Publishing.
- Climate Commission. 2012. *The Critical Decade: New South Wales climate impacts and opportunities*.
- Climate Guest Blogger. 2011. Scientist: "The Murdoch Media Empire Has Cost Humanity Perhaps One or Two Decades in Battle Against Climate Change." Aug 31, 2011 www.thinkprogress.org/climatechange/
- Commonwealth of Australia. 2011. *Securing a clean energy future: The Australian government's climate change plan*.
- Crowley, Kate. 2007. "Is Australia faking it? The Kyoto protocol and the greenhouse policy challenge."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7(4).
- Crowley, Kate. 2011. "Bounded Governance: The Politics of Carbon Pricing in Australia" Presented paper to the 6th ECPR(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General Conference. Reykjavik Iceland(2012년 5월 3일 접속).
- Cubby, Ben. 2012a. "Greenhouse gas emissions still on the rise, data shows." *Sydney Morning Herald*(이하 SMH), 2012.4.8.
- _____. 2012b. "Nation now 'indifferent' to environment." *SMH*, 4.12.
- Curran, Giorel. 2009.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climate change in Australia."

- Environmental Politics*, 18(2).
- Davis, Mark and Leonore Taylor. 2011. "Billions blown on carbon schemes." *SMH*, 2011.2.15.
-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DCCFE). 2011. *Australian National Greenhouse Accounts: Quarterly update of Australia's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y*.
- Devinney, Timothy, Pat Auger, and Rosalind DeSailly. 2012. *What Matters to Australians: Our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Values: A Report from the Anatomy of Civil Societies Research Project*.
- Dryzek, Johh. 2005. 『지구환경정치학 담론』. 에코리브르.
- Dunlap, Riley E. and Aaron M. McCright. 2011 "Organized Climate-Change Denial." in J. S. Dryzek, R. B. Norgaard and D. Schlosberg. (eds.) *Oxford Handbook of Climate Chang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Dyrenfurth, Nick and Tim Soutphommasane. (eds.) 2010. *All That's Left: What Labor should stand for*.
- Giddens, Anthony. 2009. 『기후변화의 정치학』. 에코리브르.
- Glover, Dennis. 2010 "A Red-Green coalition." in *All that's Left: What labor should stand for* Nick Dyrenfurth & Tim Soutphommasane 2010 UNSW Press.
- Glover, Julian. 2007. "The lucky country?" *The Guardian*, 2007.11.23.
- Greenpeace International. 2011. *Who's holding us back? How carbon-intensive industry is preventing effective climate legislation*.
- Griffiths, Martin, 2010. "Issues in Australian Foreign Policy: January to June 2010."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56(4).
- Hanson, Fergus. 2011. *The Lowy Institute Poll 2011: Australia and the World*.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 Harmeling, Sven. 2011.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1*. Germanwatch e.V.
- _____. 2012.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2*. Germanwatch e.V.
- Hetherington, David and Tim Soutphommasane. 2010. *What's the story? Nation-building narratives and climate politics*. Policy network essay
- Howden, Saffron. 2012a. "It's official: Australia no longer in drought." *Brisbanetimes* 2012.4.27.
- _____. 2012b. "Farmers fight with mines for land." *SMH*, 2012.5.5.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2.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2(2012년 6월 20일 접속).
- Jacques, Peter J, Riley E. Dunlap and Mark Freeman. 2008. "The organization of Denial: Conservative think tanks and environmental scepticism." *Environmental Politics*, 18(3).

- Jones, Paul and Michael Pusey. 2008 “Mediated Political Communication in Australia: Leading issues, new evidence.”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3(4).
- Kwek, Glenda. 2011. “Drought and floods: what’s coming next?” *SMH*, 2011.1.19.
- Lloyd, Graham. 2010. “Fresh hope for nation as drought breaks.” *The Australian*, 2010. 11.13.
- MacNeil, Robert and Matthew Paterson. 2012 “Neoliberal climate policy: from market fetishism to the developmental state.” *Environmental Politics*, 21(2).
- Manne, Robert. 2011a. “Newspaper wages campaign against climate change science.” *SMH*, 2011.9.3.
- _____. 2011b. “Bad News: Murdoch’s Australian and the shaping of the nation.” *Australian Quarterly Essay*, 43.
- McAllister, Ian and Juliet Pietsch. 2011. *Trends in Australian Political Opinion: Results from the Australian Election Study, 1987~2010*.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McAllister, Ian. 2011. *The Australian Voter: 50 years of change*. UNSW Press
- McKewon, Elaine. 2012. “Talking points ammo: The use of neoliberal think tank fantasy themes to delegitimise scientific knowledge of climate change in Australian newspapers.” *Journalism Studies*, 13(2)
- Mercer, Phil. 2011. “Carbon tax divides Australia.” BBC News: Asia-Pacific. 2011.7.11.
- Miragliotta, Narelle. 2006. “One Party, Two Traditions: Radicalism and Pragmatism in the Australian Greens.”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4).
- Morton, Adam. 2012a. “Australia fails carbon test.” *SMH*, 2012.3.19.
- _____. 2012b. “Climate sceptic ad backfires.” *SMH*, 2012.5.7
- Neal, Jonathan. 2011. 『기후변화와 자본주의: 시장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책갈피.
- OECD. 2010. *OECD Economic Surveys: Australia 2010*. OECD.
- Pietsch, Juliet and Ian McAllister. 2011. “A diabolic challenge: public opinion and climate change policy in Australia.” *Environmental Politics*, 19(2).
- Reporters without borders for freedom of information. 2012. Press freedom index 2011~2012.
- Rootes, Christopher. 2011. “Profile: Denied, deferred, triumphant? Climate change, carbon trading and the Greens in the Australian federal election of 21 August 2010.” *Environmental Politics*, 20(3).
- Ross Garnaut. 2008. *The Garnaut Climate Change Revi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11. *The Garnaut Review 2011: Australia in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urke, Alison. 2012. “Gina Rinehart, Australian mining magnate and now media mogul.”

- The Guardian*, 2012.2.8.
- Speck, D. Louise. 2010. "A hot topic?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ies, politics, and the media in Australia." *Human Ecology Review*, 17(2).
- The Economist*. 2011년 5월 28일자.
- Tomaney, John and Margaret Somerville. 2010. "Climate Change and Regional Identity in the Latrobe Valley, Victoria." *Australia Humanities Reviews*, 49.
- Tranter, Bruce. 2011. "Political divisions over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issues in Australia." *Environmental Politics*, 20(1).
- Verity Burgmann and Hans Baer. 2010. "The world's first climate change election." presented paper at Melbourne APSA(Australian Political Studies Association) Conference 2010.
- Wanner, John. 2010a. "Political Chronicles, Commonwealth of Australia, January to June 2010."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56(2).
- _____. 2010b, "Political Chronicles, Commonwealth of Australia, January to June 2010."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and History*, 56(4).
- Wear, Rae. 2008. "Permanent Populism: The Howard Government 1996~2007."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4).
- Yeates, Clancy. 2012 "I might pay no tax, says mine magnate." *SMH*, 2012.5.3.